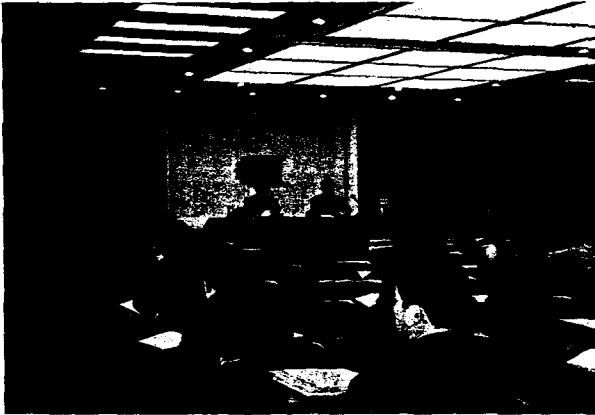


2002년 정기총회 및 공정거래 강연회 개최



보 협회는 2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10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정기 회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0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2002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정기총회 안전중 본 협회 부설 「공정거래연수원」을 「공정거래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연구소에서 공정거래제도 및 경쟁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회원사의 의견을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정거래연구소 설치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였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허 선 정책국장을 초청하여 「기업과 함께하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동 강연회에서는 △시장 경제와 기업, 그리고 경쟁 정책 △국내 경쟁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 △기업과 함께 하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 △질의 및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허 선 정책국장은 동 강연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서의 기업은 시장과 자본주의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임을 역설하면서, 구조적으로 독점적인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시키고, 행태적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관행을 치유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정책의 주된 목적임을 밝혔다.

또한 허 정책국장은 경쟁의 관점에서 지난 수십년의 경제를 설명하면서, 각 부문의 경쟁시스템 취약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오랜 동안 누적되어 온 결과, 국제금융 자본의 유동성 증가, 세계화 등 외부충격에 견뎌내지 못하고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시스템이 일시에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90년대 후반부터 경쟁 환경이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로 변화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경쟁환경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은 생산요소 투입을 통한 생산확대, 가격경쟁에 의한 비교우위만으로는 기업 및 국가발전이 가능할 수 없으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생산성 제고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Michael Porter 교수와 Sakakibara 교수의 공동연구 결과를 통하여 국내 경쟁의 정도가 기업 생산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지역적 또는 국내적 경쟁이 결여된 환경하에서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 규모가 커진다고 하여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았으며, 정부는 경제 전체적으로 경쟁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국가경쟁정책 수립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 강연회에서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을 △고객중심의 맞춤 정책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확산 △경쟁시스템 정착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자 그룹을 먼저 확정하고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접근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비자정책뿐만 아니라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산업별 특성, 기업의 형태별·규모별 특성에 맞게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경쟁도가 낮은 5~6개 시장을 대상으로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건설, 금융, 정유, 운수 등 담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업 스스로의 자율준수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시책으로 현재 한국통신 등 11개 기업이 도입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경감, 공표명령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편, 허 정책국장은 전년도의 법개정을 바탕으로 경쟁정책을 지속적으로 정착하고, 금년도의 법개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 및 응답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중 고객중심의 맞춤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소비자중심으로 경쟁정책이 추진되면 기업의 경쟁정책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응답 공동구매와 같이 소비자중심으로 경쟁정책이 추진되면 기업의 경쟁정책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며, 기업의 독점 등 반경쟁적인 행위는 사라질 것이다.

질문 금년도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없다고 하였는데, 선거와 기업환경의 변화 등 주변환경이 변화하면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개연성이 많은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입

장은 어떠한지?

응답 잦은 법개정은 오히려 관계기관 및 기업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없이 설정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질문 협회부설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소 설립후의 효익에 대하여 설명?

응답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회원사별로 적합하게 정부정책에 대응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소 설립은 필수적이며, 회원사의 권익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질문 협회부설 연구소의 구성원과 운영 등 연구소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

응답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연구소 구성원은 공정거래법을 전공한 박사학위 수준의 1인을 두고 운영은 협회의 자문위원을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 연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구소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원들에게 별도로 송부할 것이다.

질문 협회 홈페이지 구축시 뉴스레터를 업로드하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협회의 견해는?

응답 3월경 협회 홈페이지를 완료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뉴스레터 등 회원에게 유의한 정보를 신속히 업로드할 것이며, 회원의 편익과 비용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당 협회 2002년도 사업계획

1.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통한 대정부 건의 활성화

(1) 간담회 및 정책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정책 운용방향 및 제도운영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간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2) 회원간담회 개최

주요 회원사 및 업종별 회원사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회원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2. 속보형태의 「경쟁뉴스」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설

(1) 격주간 「경쟁뉴스」 발간

공정거래법 및 제도운영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별 업무추진 동향, 위원회 소식, 주요 보도자료 등을 수록한 속보형태의 뉴스레터 「경쟁뉴스」를 격주간으로 발간하여 회원사에 배포

(2) 협회 홈페이지 개설

협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의 신속한 제공과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고 공정거래제도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신규회원확충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

3.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1) 자율준수편람 작성 및 보급 강화

회원사 및 업계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확산을 위해 회원사 및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활용도가 높은 자율준수편람을 작성·보급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대회 개최

업계의 자율준수분위기 확산과 해당업체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대회 추진

(3) 공정거래 해외연수 실시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의 Leniency Program과 주요 선진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운영현황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해외연수 실시

(4) 주요 선진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열람 실시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 EU, 일본 및 우리나라 주요기업의 준수편람(매뉴얼)을 회원사에 열람 실시

4. 공정거래제도 교육 및 연수 실시

(1) 공정거래 전문연수과정 운영

연수과정을 대상별, 업무분야별, 직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법령 및 관련 실무에 관한 사례중심 등 체계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2) 회원사 사내 공정거래교육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탁교육 실시

회원사의 사내 공정거래교육 프로그램을 회원사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제공하고 강사 및 교재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업계의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율적인 공정경쟁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교육 실시

5. 「공정거래연구소」 설립 및 조사·연구기능 강화

협회 부설 공정거래연구소를 설립하여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와 업계의 공정거래관련 연구용역 수행 및 공정거래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책입안과 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